



# 경제안보 Review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24-15호, 2024.8.30.(금)

## 경제안보분석

### 주요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전문관

1. 글로벌 전기차 산업 현황
2. 주요국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3. 시사점

## 경제안보현안

### '24-'29년 EU 집행위 정책 지침서\*의 경제안보 관련 내용 분석

임산호 선임전문관

\* "Europe's Choice,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1. 배경
2. 주요 내용
3. 주요 의제별 세부 내용
4. 정책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경제안보연구동향

### 핵심광물 개발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

유아름 전문관

※ (원문) James Boafol Jacob Obodai, Eric Stemn, and Philip Nkrumah(2024),  
"The race for critical minerals in Africa: A blessing or another resource curse?"

1. 요약
2. 주요 세부 내용
3.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EWS/공급망 및 에너지 동향

- [수출통제, 중국] 中 상무부, 안티모니(안티몬) 등 수출통제 조치 발표
- [관세, EU] EU 집행위,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따른 최종 상계관세 발표
- [보조금, EU] 中 상무부,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개시
- [IRA,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미국 의회 동향

### 경제안보분석

## 주요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전문관

### 요약

- **(현황)** 전기차 시장 성장 정체로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로 자국 전기차 시장 잠식에 대한 업계 우려 확대
  - 中 전기차 업체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생산 과잉 ▲중국 내 높은 보급률('23년 전기차 판매 비중 38% 달성)에 따른 중국 내 시장 성장 정체로 경쟁 과열에 직면 → 해외 진출 확대로 자구책 마련 중
  - ※ 中 전기차 브랜드의 對EU 수출 비중은 '21년 이후 지속 증가세(2.4%('21)→4.7%('22)→7.6%('23))
- **(주요국 정책 동향)** 美·EU는 자국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정책 수정 및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 방지를 위한 관세 부과 / 中·ASEAN 등은 전기차 시장 육성정책 지속
  - (EU) 각국은 자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정책 속도 조정\* /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 방지를 위한 EU 차원의 관세 부과 조치 발표\*\*
  -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英 '23년 폐지,獨 '23.12월 중단 선언) ▲(英)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조정('30년→'35년)
  - \*\* BYD(17%), Geely(19.3%), SAIC(36.3%) 등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10%)에 17~36.3%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
  - (美) 노동자 표심 확보를 위한 정책 수정 논의 확대 / 전기차 산업 관련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 ※ 바이든 행정부는 배기가스 규제 강화 계획 완화 / 트럼프 전 대통령 내연기관차 차량 옹호 입장 표명
  - (中) 국내 전기차 보급 정책 지속 / 자국산 전기차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추진
  - ※ ▲전기차 취득세 면제 정책 연장 ▲법정부 차원의 전기차 수출 지원 정책 발표
  - (ASEAN) 자국 투자 확대 및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적극 추진
  -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전기차 관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제공
- **(시사점)** ▲각국의 전기차 정책 수정 논의 및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에 따른 주요국의 관세, 투자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시 필요
  -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23년 기준, 95%), 미국과 EU의 관련 정책 수정은 우리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에 직접적 영향
  - 특히,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수정시 전기차 수요 확대를 기대하며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한 국내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 부가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전기차 업체의 관세 회피 목적의 해외투자 확대가 예상되는데,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 확대 등 우리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 EU의 반보조금 조사 결과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EU 역내 추가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BYD, 장성 자동차는 헝가리에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 중 / Chery 자동차와 스페인 Ebro EV Motors는 바르셀로나 공동투자 발표(24.4)

## 1. 글로벌 전기차 산업 현황

### ■ (수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중심의 빠른 초기 성장 이후 일시적 성장 정체 국면인 캐즘(Chasm) 단계에 직면

○ 세계 전기차 판매증가율은 '21년 이후 지속 감소(102.6%('21)→61.5%('22)→33.4%('23)→20%('24, 전망) / '23년 글로벌 차량 판매에서 내연기관차 비중(82%)은 여전히 압도적(IEA, 2024)

- 특히, 주요 시장인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성장 정체 추세 (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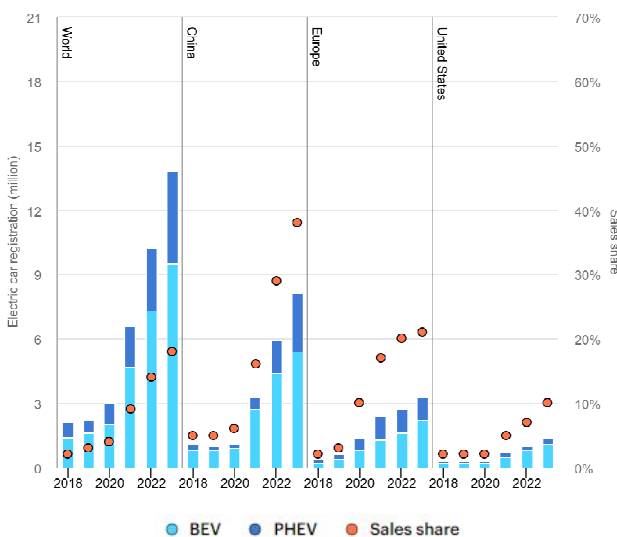
\* 전체 차량 중 전기차 판매 비중 : (中) '21년 16% → '22년 29% → '23년 38% / (유럽) '21년 17% → '22년 20% → '23년 21%

○ 충전 시설 등 전기차 관련 인프라 미비, 내연기관차 대비 비싼 전기차 가격 등의 영향으로, 3대(중국, 유럽, 미국) 시장을 제외한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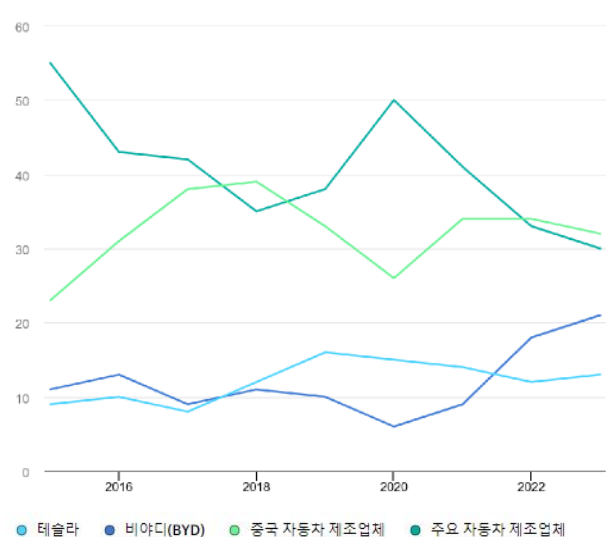
- '23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중 95%가 중국, 유럽, 미국에 편중\*

\* '23년 신규 등록 전기차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60%), 유럽(25%), 미국(10%) 순(IEA, 2024)

[그림 1] 주요국 전기차 등록수 및 판매 비중 ('18년-'23년)



[그림 2] 업체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5년-'23년)



\* BEV : 배터리 전기차, PHEV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Sales share : 전체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  
출처 : IEA(2024), p.91

### ■ (공급) 주요 시장(중국, 유럽, 미국)의 성장 정체로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中 전기차량의 수출 확대로 중국 업체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잠식에 대한 업계 위기감 고조

○ 美 업체(Tesla)와 전통 완성차 업체가 초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BYD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 업체가 연이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며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 '23년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 점유율은 ▲中 BYD(20.5%), ▲美 TESLA(12.9%), ▲33개 중국 전기차 업체 32%(中 SAIC(6.5%), 中 Geely(6.4%) 등), ▲주요 차량업체 30%(獨 폭스바겐(7.1%)) 순 (그림2 참조)

○ 中 전기차 업체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생산 과잉 ▲중국 내 높은 보급률('23년 전기차 판매 비중 38% 달성)에 따른 중국 내 시장 성장 정체로 경쟁 과열에 직면 → 해외 진출 확대로 자구책 마련 중

- '23년 중국은 약 120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전년 대비 80% 성장) / 中 전기차 브랜드의 對EU 수출 비중은 '21년 이후 지속 증가세(2.4%('21)→4.7%('22)→7.6%('23))

## 2. 주요국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 (EU) 각국은 자국 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정책 속도 조정 /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 방지를 위한 EU 차원의 관세 부과 조치 발표 → EU·중국 간 통상 마찰 지속
  - (전기차 정책) ▲(독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기 중단 선언('23.12)\* ▲(영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조정('30년→'35년) / 전기차 보조금 폐지('23) ▲(프랑스) EU외 국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23.12)
    - \* 보조금 축소에 따라 '22년 독일 내 전기차 판매 비중 30% → '23년 25%로 감소(IEA, 2024)
  -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EU 역내 수출 증가에 대응하여 EU 차원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으나, ▲회원국 간 견해 차이 ▲중국의 맞대응 조치 등으로 관세 집행 불확실성 지속
    - (관세 조치) EU 집행위는 '23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최근 잠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7.4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상계관세 부과를 발표(8.20일)
      - \* BYD(17%), Geely(19.3%), SAIC(36.3%) 등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10%)에 17~36.3%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
    - (회원국 간 이견) 對중국 관세 부과를 두고 EU 회원국 간에도 상이한 입장이 관찰\*되는바, 최종 관세 부과 승인 투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
      - \* 독일과 헝가리, 스웨덴은 대중 관계에 부정적이라며 반대,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중국의 EU 투자 확대 기회라 여겨 찬성
      - \*\* (향후 일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8.30일까지) → EU 회원국 최종관세 부과 승인 여부 투표(EU 회원국 55%, EU 인구 65% 이상 찬성시 통과) → 최종관세 부과(10.30일 이내)
  - (중국 대응) EU의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에 따라 중국 정부는 WTO 제소, EU의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대응 조치 본격화
    - ▲EU산 브랜드 반덤핑 조사 착수(1.5일) ▲고배기량 승용차 추가 관세 인상 관련 의견 수렴(8.23일) ▲EU산 돼지고기·유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6.17일 / 8.21일) ▲EU의 임시 상계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8.9일) 등을 발표

〈표 1〉 전기차 관련 EU 및 EU 주요국 정책 동향

정책 유형		주요 내용
EU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종 상계관세 부과 발표(8.20) : BYD(17%), Geely(19.3%), SAIC(36.3%) 등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17~36.3%)</li> </ul>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獨)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선언('23.12)</li> <li>(英) 전기차 보조금 폐지('23)</li> <li>(佛) 전기차 부품 생산, 조립, 완성차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등을 점수로 계산하여 점수 미달 시 보조금을 미지급하여 사실상 EU 외 국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23.12)</li> </ul>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英)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조정('30년→'35년)</li> <li>EU 차원의 '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은 유지 중(e-퓨얼은 적용 제외)</li> </ul>

출처 : 언론을 종합하여 저자 정리

- (美)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 확보를 위한 전기차 정책 수정 논의 확대 /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 대비 추가 관세 부과 추진
  - (정책 수정 논의) 미국 대선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 차이가 견지됨에 따라 미국에서 추진 중이던 전기차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기존 추진하던 전기차 관련 정책(IRA 등)을 상당 부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선을 앞두고 일부 배기가스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
    - 바이든 행정부는 '27년부터 배기가스 감소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32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율을 3분의 2로 향상한다는 목표를 제시('23.4)하였으나, 최근 규제 적용 시기('27년→'30년)를 연기('24.3) /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를 자동차 업계 표심 확보를 위한 조치로 평가\*
    - \* 美 자동차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기준 충족을 위해 단기간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으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되는 노동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우려 제기
    - (트럼프) 바이든이 추진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IRA 등) 재검토 / 배기가스 규제 및 연비규제 완화 입장을 표명하며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자동차 산업 일자리 상실 및 전기차 보급에 따른 중국 의존도 확대 주장\*
      - \* 트럼프 러닝메이트 밴스 부통령 후보는 '23년 전기차와 관련된 세금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미국 내 자동차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Drive American Act 법안 발의
    - 단, 중국 차량 제조업체의 미국 내 생산에 대해서는 개방적 견해 표명\*(Reuters, '24.8.21)
      - \* 트럼프는 중국과 다른 국가가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를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고용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언급

〈표 2〉 미국 전기차 관련 정책 논의 동향

정책 유형		민주당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공화당 (트럼프)
미국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1조 근거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대해 추가 관세 발표('24.5.14)</li> <li>8월 중 부과 예정이던 관세 조치의 최종결정 발표 연기('24.7.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관세 부과 및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일괄 부과</li> <li>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의 미국 수출 억제 목적의 신규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li> </ul>
	보조금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전기차 세액공제 유지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등 IRA 법안 재검토</li> </ul>
	배기가스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 배기가스 규제 적용 시기를 '27년에서 '30년으로 연기('24.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기가스 규제 및 연비규제 완화 등 내연기관 차량 옹호 입장 표명</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에 처한 전통 자동차 제조 및 조립시설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전환 관련 1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 발표('24.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자동차 업체의 멕시코 공장 건설 저지 관련 언급</li> <li>중국 및 해외 차량업체의 미국 투자에 개방적인 입장 언급</li> </ul>

출처 : Reuters('24.8.21), Bloomberg('24.7.19), CNN('24.7.11) 등 미 언론 종합

- (관세) 美 시장에서 中 기업의 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나, 바이든 행정부는 301조에 근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100%) 부과 발표('24.5.24)
  - 전기차, 배터리 관련 품목의 관세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기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핵심 광물 품목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신규 포함 →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 전체 전기차 공급망에 대해 관세 부과
    - ※ 단, 시행 시기는 중국 외 지역으로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24년, 25년, 26년)
  - 관련하여,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100% 관세 부과 예정을 발표(8.26)

〈표 3〉 전기차 관련 품목 대중 관세 부과(301조) 주요 변경 사항

분류	품목	시행 시기	관세율
기존 대상	전기차(Electric vehicles)	24년	25%(현행) → 100%(변경)
	배터리 부품 (Battery parts, non lithium-ion batteries)	24년	7.5%(현행) → 25%(변경)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lithium-ion electrical vehicle batteries)	24년	7.5%(현행) → 25%(변경)
	리튬이온 배터리 (lithium-ion non electrical vehicle batteries)	26년	7.5%(현행) → 25%(변경)
신규 추가	천연 흑연(Natural graphite)	26년	0%(현행) → 25%(변경)
	기타 핵심 광물(Other critical minerals)	24년	
	영구 자석(Permanent magnets)	26년	

출처 : USTR(24.5.24)

- (향후 일정) USTR은 최근 '24.8.1. 시행 예정이던 301조 관세 조치의 최종결정 발표의 연기를 발표('24.7.30) / USTR은 접수된 의견(약 1100건) 심사 후에 최종결정 발표 예정
- 일각에서는 미 대선을 앞두고 관세 인상이 원가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업 불만에 따른 조치로 해석 / 해리스 후보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트럼프의 보편관세 구상을 비판

## ■ (中)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자국 내 전기차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추진

- 최근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중국 전기차 업계의 가격경쟁 및 통합이 강화되는 단계이나,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지속
  - ▲ 전기차 구매세 면제 정책 연장 ▲ 완성차 업체의 신에너지차(NEV) 의무생산 규정 강화 ▲ 범정부 차원의 전기차 수출 지원 정책 발표 ▲ 지방 정부 차원의 인프라 및 생산 확대 정책 발표 등

〈표 4〉 중국 전기차 관련 정책 추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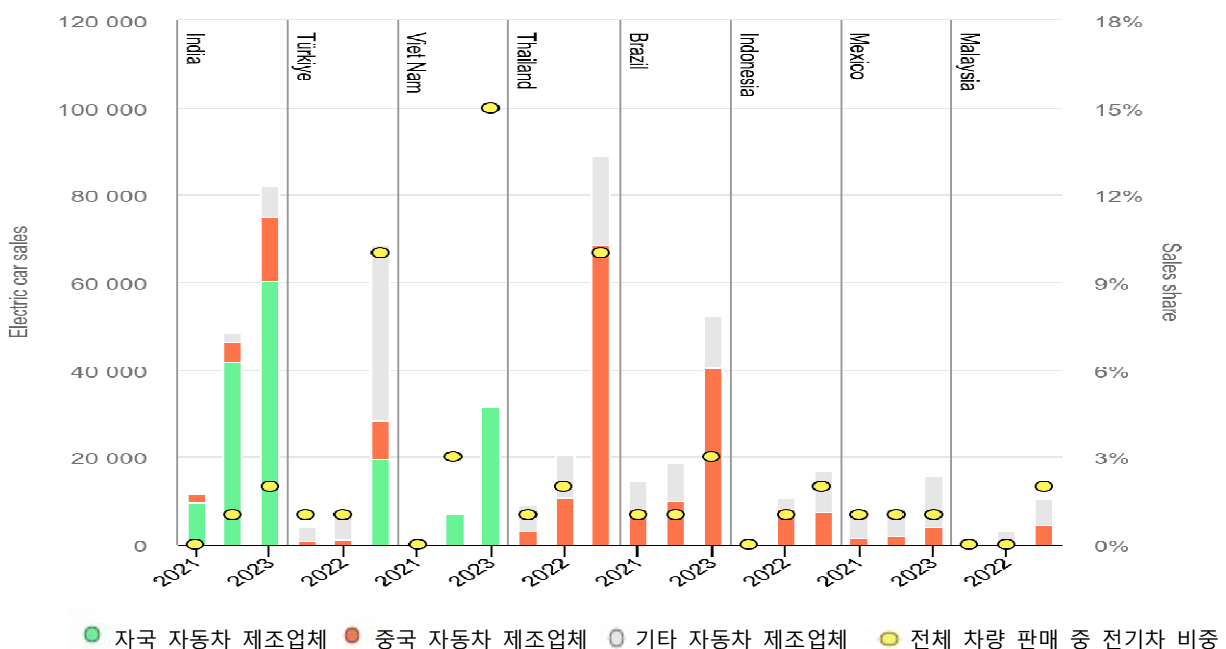
정책 유형		주요 내용
중국	판매 비중 설정	'27년까지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차량 판매 비중 45% 달성 (국무원, 아름다운 중국 건설 전면 추진 방안('23.12.27))
	세제 정책	신에너지 차량(NEV) 구매세 면제 정책 연장('23.6.19.) (기존 '25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27년까지 연장 / 구매된 차량의 구매세 50% 감면)
	수출 지원	신에너지차 무역 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 발표('24.2)를 통해 전기차 업체 대상 대출 및 수출신용보험, 외환 거래, 위안화 결제 등 지원
	기타 정책	지방 정부 차원의 인프라 및 생산량 확대 등 산업 육성 정책 지속 (광둥성 정부, '25년까지 NEV 300만 대 생산 / 충전소 21만 개 설치 계획 발표('24.1.18) 허난성 정부, NEV에 대한 국가세 면제 이외에 구매 보조금 5% 추가 지원 상하이시 정부, '24년 공공 전기차 충전소 1만 개 건설 추진 등)

출처 : 중국 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저자 정리



- **(신흥시장)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 / 중국 등 해외 업체의 자국 시장 진출에 개방적 정책 유지 → **최근 동남아시아, 브라질 등 다수의 국가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확대**
  - **(태국)** '30년까지 자동차 생산량의 30% 전기차 전환 계획 추진 / 국내 배터리 제조 보조금, 수입세 및 소비세 인하 정책 추진
    - 태국은 아세안 지역의 전기차 제조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4년 내 28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Bangkok Post, 23.10.26)
    - 태국 정부의 전기차 전환 계획에 따라, BYD, SAIC 등 **중 전기차 업체의 태국 시장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며 최근 태국 내 전기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
      - \* '23년 태국 전기차 신규 등록 수는 8배 증가(전체 차량 판매 중 10%를 초과하여 미국과 유사한 수준)
  - **(인도네시아)** 전기차에 대해 ▲사치세 ▲수입세 면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추진
    -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인니에 대규모 투자 계획(약 1조 7천억원) 발표 → 인니 정부는 투자 예정인 전기차 업체에 관세와 사치세 면제 혜택 제공 발표
  - **(말레이시아)** 전기차 제조 투자 기업 세금 감면, '27년까지 현지 조립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25년까지 전기차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정책 추진
    -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따라 '23년 전기 자동차 등록이 3배 이상 증가 / 주요 전기차 업체(벤츠, 테슬라, BYD 등)의 시장 진출 본격화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각 국가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이 맞물려, ASEAN, 브라질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2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단, 자국산 전기차 업체를 육성하는 일부 신흥시장(베트남, 인도 등)은 전기차량에 대한 높은 관세율 유지

[그림 3] 주요 신흥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및 전기차 판매 비중('21-'23년)



출처 : IEA(2024), p.48

### 3. 시사점

#### ■ 미국과 EU의 보조금 정책 등 전기차 정책 수정 및 對中 관세 조치 등 관련 동향 지속 관찰 필요

○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 편중('23년 기준 95%)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EU의 정책 수정은 우리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에 직접적 영향

- 특히,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수정시 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를 기대하며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한 국내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전기차 성장 동력은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카 등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한 완성차 업체와 달리 전기차 수요에 대부분 의존(약 80%)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산업연구원, '24.5.31.)

#### ■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에 따른, 주요국의 관세, 투자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시 필요

○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과 EU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EU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확대할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 업체와의 경쟁 확대 가능

- EU 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 결과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EU 역내 추가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최근 중국 BYD, 장성자동차는 헝가리에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 중 / Chery 자동차와 스페인 Ebro EV Motors는 바르셀로나 공동투자 발표(24.4)

○ 中 기업이 공격적인 신흥시장 투자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여 향후 국내 업체의 신규시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자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전기차 업체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이 맞물려,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2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국내 시장 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국산 제품과 현격한 가격 격차로 인해 빠르게 국내 시장 점유 가능성

※ BYD(세계시장 점유율 1위, 20.5%, '23년) 연내 한국 진출 예상(세단 Seal 국내 인증 심사 중)



## 〈참고문헌〉

- 김단비(24.2.2.),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동향과 시사점, 24-2호, 경제안보리뷰
- 황경인(24.5.31.),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ESG경제(24.4.24.), 유럽감사원(ECA), "EU '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규제 재검토 해야",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436>(24.8.27. 최종접속)
-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23), Global EV Outlook 2023 : Catching up with climate ambitions
-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24), Global EV Outlook 2024 : Moving towards increased affordability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홈페이지, Global EV Policy Explorer
- USTR(24.5.24), USTR Extends Certain Exclusions from China Section 301 Tariffs
- THE WHITE HOUSE(24.5.14),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Action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 Bangkok post(23.10.26), Thailand bets on EVs to draw trillion baht in foreign investment,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investment/2671909/thailand-bets-on-evs-to-draw-trillion-baht-in-foreign-investment> (24.8.27. 최종접속)
- Bloomberg(24.7.19.) Trump Vows to End Electric Vehicle 'Mandate' on Day On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7-19/trump-vows-action-to-end-electric-vehicle-mandate-on-day-one> (24.8.27. 최종접속)
- CNN(24.7.11),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a \$1.7 billion plan to juice electric vehicles in America,  
<https://edition.cnn.com/2024/07/11/business/biden-administration-ev-electric-vehicles-manufacturing/index.html> (24.8.27. 최종접속)
- Reuters(24.8.21.), Trump says he may end EV tax credit; is open to naming Elon Musk as an adviser,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says-he-would-consider-ending-7500-electric-vehicle-credit-2024-08-19/> (24.8.27. 최종접속)

### 저자 소개

**김단비** dbik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신흥기술, 공급망, 미중기술경쟁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글로벌 경쟁 분석 및 국가 포지셔닝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이 있다.

## 경제안보현안

## '24-'29년 EU 집행위 정책 지침서\*의 경제안보 관련 내용 분석

\* 'Europe's Choice,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참조

임산호 선임전문관

## 1. 배경

- '24.7.18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두 번째 연임에 성공\* 후, 당선 당일 2024-2029년 EU 집행위의 정책 지침서(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이하: 정책서) '유럽의 선택(Europe's Choice)' 발표(30페이지 분량)

\*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1958년 이후 세 번째, 여성으로서는 최초. 두 번째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시작

- 정책서는 작성 목적이 ▲연합이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등 기존에 합의된 정책을 추진력 있게 실행하고, ▲회원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24-'29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다룬 정책서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향후 EU 경제안보 전략의 흐름을 검토

## 2. 주요 내용

- 정책서는 '24-'29년간 유럽의 행보가 향후 50년 동안 세계에서 유럽의 위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보, 기후변화, 경쟁력 확보 등 개별 회원국의 힘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과제들에 유럽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 강조
- 세계적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은 '연합'임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더욱 강력한 연합을 준비하겠다는 목표 제시
- 정책서는 총 7개의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 경제, ▲국방이며, 이외 ▲사회, ▲삶의 질, ▲가치와 민주주의, ▲국제협력, ▲연합의 재정비로 구성
  -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부분은 ▲경제, ▲국제협력 부문에 집중
  - 정책서는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변혁에 대응해 유럽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특징

## 3. 주요 의제별 세부 내용

- (경제) 유럽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경쟁력을 위한 계획(A new plan for Europe's sustainable prosperity and competitiveness)

- 유럽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높은 에너지 가격, 기술과 노동력 부족, 자본 접근성 하락)을 거론하며, 기후중립 목표 달성과 첨단기술 개발 경쟁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유럽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아래 계획들을 제시

세부주제	주요내용
사업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를 확장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정책 접근방식 마련</li> <li>- EU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속도 개선, 일관성 확보, 단순화 확대를 우선순위</li> <li>-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실패비용을 줄이고, 여러 회원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li> </ul>
클린산업딜 (Clean Industrial D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기 후 100일 내 경쟁력있는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b>‘클린산업딜’ 발표 계획</b> : 기업이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li> <li>- ‘40년까지 90% 배출감소 목표가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에 포함되도록 제안할 계획</li> <li>- 산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b>산업탈탄소화촉진법</b>(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 제안 계획</li> <li>- 연료 공동조달을 강화하고, 에너지연합에 필요한 거버넌스를 개발해 에너지가격을 인하할 계획</li> <li>- 수소, 핵심원자재를 포함하도록 총수요메커니즘(aggregate demand mechanism)을 확장할 계획</li> <li>- 원자재,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해 <b>청정무역·투자파트너십</b>(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s) 구축</li> <li>- 국제 기후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브라질에서 개최될 COP30에 의제 제시 등)</li> <li>- 비-EU 회원국과의 녹색외교 강화</li> <li>- 이동성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광범위한 범위의 기술 혁신 (e-연료 등)</li> </ul>
순환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순환경제법</b>(Circular Economy Act)은 핵심원자재 재사용과 관련해 시장 창출에 도움될 전망</li> <li>- <b>화학산업패키지</b>(chemicals industry package) 통해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간소화하고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공</li> <li>-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을 통해 핵심의약품 의존도 감축 노력, 전략적 재고 확보</li> <li>- 유럽보건연합(European Health Union)의 완성을 위해 공급망 확보, 최첨단치료에의 접근성, 회복력 있는 건강 시스템 구축 등</li> <li>- 병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유럽 행동계획 제안</li> </ul>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채택된 <b>디지털 법률</b>(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의 구현 및 집행에 집중할 것</li> <li>- 슈퍼컴퓨팅, 반도체, 사물인터넷, 양자기술, 우주기술 등 <b>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b></li> <li>- 임기 후 100일 내 <b>AI Factory Initiative</b>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AI 스타트업 및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슈퍼컴퓨팅 용량을 제공할 계획</li> <li>- <b>APPLY AI 전략</b>을 마련해 AI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 개선을 추진</li> <li>- <b>유럽 AI연구위원회</b>(European AI Research Council)를 설립해 EU의 AI 자원을 확보</li> <li>- 유럽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성을 개선하고 명확하며 일관성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b>유럽 데이터연합전략</b>(European Data Union Strategy) 제시</li> </ul>
연구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략적 우선순위, 기초연구, 혁신적 기술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지출 확대</b></li> <li>- 유럽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 확대 계획</li> <li>- ‘25년 새로운 <b>유럽 바이오테크법</b>(European Biotech Act)을 제안할 계획</li> <li>- 공동사업 등 <b>민-관 파트너십을 강화</b>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 및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li> </ul>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과 협력 강화해 <b>공공자금 조달</b></li> <li>-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 추진하여 <b>유럽으로 민간 자본 유치</b></li> <li>- 유럽저축투자연합(European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제안할 계획</li> <li>- 공공조달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li> <li>- NextGenerationEU와 현재 EU예산을 활용해 사용가능한 자원 조달을 보장</li> <li>- 신규 <b>유럽경쟁력기금</b>(European Competitiveness Fund)을 제안해 우주, 청정기술, 생명공학 등 <b>전략적 기술을 유럽 내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투자</b></li> <li>- 유럽경쟁력기금으로 유럽공동이익프로젝트(IPCEI) 지원. 첫 번째 IPCEI 세트는 25년 초 제안 예정</li> </ul>
기술과 노동력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유형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술연합을 설립</li> <li>- 기술향상에 중점을 둔 STEM 교육전략계획을 제안 계획</li> <li>- 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유럽전략(European Strategy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계획</li> <li>- 습득한 기술이 외국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성이니셔티브(Skills Portability Initiative)를 제시</li> </ul>

■ (방위) 유럽의 방위와 안보를 위한 새로운 시대(A new era for European Defence and Security)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유럽의 평화의 얼마나 취약한지 알려졌으며, 이는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잠재적인 적대자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작용했다고 언급
-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지속하고, 방위 부분의 의존도 감축을 추진할 계획

세부주제	주요내용
유럽방위연합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국방위원 임명하고, 임기 시작 후 100일 내 새로운 유럽방위의 미래를 위한 백서를 발표할 계획)</li> <li>- 사이버, 하이브리드, 우주 등 모든 위협을 포괄해 EU-NATO 파트너십 강화 계획</li> <li>- <b>첨단 방위역량에 투자하기 위해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을 설계</b></li> <li>- 공동조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EU의 역량 개발을 위해 유럽방위산업 프로그램(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강화</li> <li>- 방위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b>단일시장을 구축해 유럽의 생산능력과 공동조달 강화</b></li> <li>- 주요 유럽 방위연합프로젝트를 통해 공통의 위협에 대응, 유럽투자은행과 협력하여 공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li> </ul>
연합의 준비역량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합준비전략(Preparedness Union Strategy) 수립</b> (핀란드 전 대통령 Sauli Niinistö의 보고서 참조) : 그 일환으로 <b>사이버안보역량 강화, 핵심인프라 보호 확대, 사이버안보산업 개발</b></li> <li>- 화학적·생물학적·방사성물질(CBRN) 관련 안보 위협에 대응해 연합의 공통 전략 마련 계획</li> </ul>
더욱 안전한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내부안보전략(European Internal Security Strategy) 제안 계획</li> <li>- 법 집행 기관이 디지털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를 제공</li> <li>- 고위험 범죄네트워크 대응/ 반부패 조사 권한 확대/ 마약밀매에 대한 유럽행동계획 등 계획</li> <li>- 안보, 경쟁력, 경제적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유럽항만전략(EU Port Strategy)을 지원하고, 유럽항만연합(European Ports Alliance)을 구축</li> <li>- 유럽핵심커뮤니케이션시스템(European Critical Communication System) 중심의 안보시스템 접근성 구축</li> </ul>
공동국경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국경관리 강화/ 최첨단 감시 및 상황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한 국경 안보 구축</li> <li>- 쉼튼 자유이동지역 보장해 내부의 국경통제를 제거</li> </ul>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및 망명에 관한 협정(Pact on Migration and Asylum) 이행 통한 이민 관리</li> <li>- 새로운 유럽 이주 및 망명 전략(European Migration and Asylum Strategy)이 필요한데, 이민 프로세스 단순화하고, 공정하고 확고한 기준을 바탕으로 새로운 입법 프레임워크 제시할 계획</li> </ul>

■ (사회) 유럽식 사회와 사회모델을 강화(Supporting people, strengthening our societies and our social model)

- 유럽은 유럽만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 경제의 경쟁우위이자 사회의 필수적인 기둥
-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위기가 생활비, 소득의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등 부문에서 유럽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식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세부주제	주요내용
사회적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사회권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에 대한 새로운 행동계획을 제시 (AI 관리, 원격근무 등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등을 고려)</li> <li>* 유럽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게 하는 일자리, 복지에 관련된 기본 원칙</li> <li>- 사회의 변혁에 따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전환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질 높은 일자리 로드맵(Quality Jobs Roadmap) 마련 계획</li> <li>- 최초의 EU 빈곤 퇴치전략 마련하고, 교육·의료·필수 공공서비스·아동부문의 보장을 강화</li> <li>- 유럽 최초의 주택계획을 마련하고, 유럽투자은행과 협력해 주택위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li> <li>- 인구통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개혁과 투자</li> </ul>
사회 재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을 임명하고, 연례 청년정책 협의회를 조직할 계획</li> <li>- 소셜미디어, 온라인서비스의 중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EU 차원의 조사 시작</li> </ul>
평등의 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이후를 위한 새로운 성평등 전략, 여성 권리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li> </ul>

■ (자원) 삶의 질 유지 : 식량안보, 물, 자연(Sustaining our quality of life: food security, water and nature)

- 농업은 유럽식 삶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전략적 자산이자 식량주권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 명시
  - 오늘날 기후변화 영향, 에너지 가격, 불공정한 경쟁에서 압박받고 있는 농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기 시작 후 100일 내 농식품 부문에 대한 비전(Vision for Agriculture and Food)을 제시하는 등 농업 부문의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 계획 제시
- 나아가 유럽 어업 사슬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해양 위원을 임명하고 유럽해양협정을 발표할 계획이며,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

세부주제	주요내용
기후적응, 준비,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유럽에서 홍수, 화재, 가뭄을 발생시키는 기후변화에 대해 참여국 간 역량을 모으기 위해 유럽시민보호매커니즘(Union Civil Protection Mechanism)을 통해 대응 중, 그러나 기후변화 위험의 파급력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체계가 사회 전체의 접근과 군사적 도구를 활용을 위한 유럽시민방위매커니즘(European Civil Defence Mechanism)로 확대할 계획</li> <li>- 유럽기후적응계획(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n)의 부분으로 인프라, 수자원, 식량, 토지의 위험 평가와 대비 필요성, 조기경보시스템 필요성을 맵핑할 계획</li> <li>- 식량, 에너지, 경제안보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기후변화와 수요증가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유럽수자원전략(European Water Resilience Strategy)이 필요함을 밝힘</li> </ul>

■ (민주주의) 유럽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보호(Protecting our democracy, upholding our values)

- 글로벌 파편화 속에서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유럽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정책 계획 제시

세부주제	주요내용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내 외국의 정보 조작과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민주주의방패(European Democracy Shield)를 제안할 계획</li> <li>- 유럽 내 사실확인(fact-checkers)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EU의 디지털 규정 시행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법(DSA), AI법 등 기존 규정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보호</li> </ul>
법치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의 법치주의보고서(Rule of Law Report)*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해 범국가적 문제들에 대응</li> <li>*사법제도, 부패방지, 미디어의 자유 등 EU 회원국의 법치와 관련된 발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매년 발표</li> <li>- 법치주의 보고서의 권장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EU 기금을 활용하는 등 재정 자원과의 연계 강화</li> </ul>
시민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시민패널(European Citizen's Panel)*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li> <li>*회원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50인이 토론을 바탕으로 집행위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제도</li> </ul>

■ (국제협력) 세계 속의 유럽 (A global Europe: Leveraging our power and partnerships)

- 권위주의적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 중동 전체의 불안정화,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중국과의 불공정 경쟁 문제 등 세계 균열의 순간을 목도
- 에너지, 이주, 기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정책이 무기화되고 있으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훼손되고 국제기구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될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
-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은 G7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에서 시작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과 에너지, 안보, 회복력 등 공통관심사를 중심으로 관계 강화할 계획 언급



세부주제	주요내용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고 강력한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에서 유럽이 더 큰 지정학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추진. 역외 의존도를 감축하고 유럽의 회복력, 경쟁력을 강화</li> <li>- EU 회원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위원을 임명하고, 후보 국가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 (Growth Plan for the Western Balkans, Growth Plan for the Ukraine Facility 활용)</li> </ul>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중해 담당 위원(Commissioner for the Mediterranean)을 임명, 지중해 국가들과 투자, 파트너십,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 이주 등 분야에 집중</li> <li>- 중동에서 유럽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며, 특히 포괄적 EU-중동 전략(comprehensive EU-Middle East Strategy)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2-국가 솔루션 등을 제안할 계획</li> </ul>
새로운 경제외교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날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이 분리될 수 없으며, 무역과 경제적 개방성은 번영을 위해 필수. 세계가 기술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경제적 의존성이 무기화되며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b>현실에 맞는 새로운 경제외교 정책이 필요</b></li> <li>- <b>새로운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요소는 경제안보, 무역, 파트너십 투자</b>  <b>(경제안보)</b> 경쟁력 강화 및 연구역량 투자. 기술수출 및 안보문제에서 유럽 경제를 보호. 외국인직접투자심사 체계를 완료하고 수출통제에 대한 조정된 접근방식을 구축하고, 해외투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계획. 특히, G7 및 기타 유사입장국 파트너와 함께 공급망에 대한 경제안보 기준을 개발할 계획  <b>(무역)</b> <b>청정무역·투자파트너십을 추진</b>해 핵심광물 및 핵심원자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무역방어수단을 활용하여 대응  <b>(파트너십)</b> 유럽 주도의 인프라개발프로젝트인 Global Gateway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 무역, 거시적 경제지원을 패키지로 추진. 회원국, 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수출신용기관 등을 동원해 Team Europe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  <b>(인태지역 파트너와 관계 강화)</b> ▲ 새로운 EU-인도 전략적 의제 제안, ▲ ASEAN 국가들과 협력 강화, ▲ 사이버·우주·핵심광물·핵심기술 부문에서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와 협력 강화  - (아프리카 파트너와 관계 강화) ▲ '25년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담 계획, ▲ Global Gateway를 통한 운송로, 항구, 재생에너지, 원자재 가치사슬 투자 확대해 아프리카와의 상호 파트너십 원동력으로 추진  - (EU-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협력 강화) Global Gateway 투자와 에너지 부문 중심</li> </ul>
다자주의의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과 규범 마련을 주도함으로써 강력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특히, 디지털과 같이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한 부분)</li> <li>- 그린딜 정책 등 유럽이 새롭게 제정한 법률의 영향을 받는 파트너 국가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대응</li> <li>- 비-EU 국가들에 미치는 유럽 법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마련하고, 이들 국가가 해당 법률에 적응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li> </ul>

## ■ (연합의 재정비) 미래를 위한 연합의 준비 (Delivering together and preparing our Union for the future)

### ○ 지난 임기에서 추진한 연합의 현대화 프로그램에 이어 실행과 개혁에 집중할 계획

세부주제	주요내용
새로운 예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예산 지출에 있어서 단순성, 유연성, 속도, 전략적 집중이 필요</li> <li>- 예산의 중복지급을 막고 우선순위에 집중해 지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로 됨</li> <li>- 25년 장기예산 제안 계획: ▲ 정책의 우선순위와 목표에 집중해 지원, ▲ 작동을 단순화, ▲ 유럽경쟁력기금(European Competitiveness Fund)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li> </ul>
개혁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의 개혁을 위해 조약(Treaty)*을 변경하고, 회원국 확대를 EU 역량 확대의 발판으로 활용  * 연합의 기초적인 헌법에 해당하는 효력</li> <li>- 의사결정 절차 등을 검토하여 연합의 행동능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할 계획</li> </ul>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부터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파트너십 강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의회가 법안 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지 (의회의 제225조 결의안에 협력)</li> <li>- 유럽의회와 협력하여 기본 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기관간 공동의 정치적 책임 확대, 정보흐름 원활화,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환경 구축</li> </ul>



## 4. 정책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책서를 통해 지난 임기에서 합의된 법안들에 대해 두 번째 임기 동안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
  -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경화 확대 기조가 나타나면서 그린딜 등 EU 환경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기존에 통과된 법안들의 이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발표된 정책서에서는 유럽의 청정기술 산업경쟁력 확보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
  - 정책서에서 언급된 ‘클린산업딜’ 계획은 녹색성장이라는 기본 개념은 유지하면서도 산업경쟁력과 기술개발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및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골자
  - 여기에는 환경정책에 대한 과도한 쓸림이 EU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그린딜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우파 정당의 세력 확대, 자연복원법 등 EU 법안에 반발한 ‘23년 EU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 \* 이번 정책서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에너지 가격, 불공정한 경쟁으로 압박받고 있는 농업계의 어려움을 별도로 강조하며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발표를 약속했는데,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농민 시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 한편, 비-EU 국가들이 새롭게 제정된 유럽의 법안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고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명시한 배경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들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
- 국제협력 부문에서 인태지역 국가들과 관계심화를 추진하며, 특히 사이버·우주·핵심광물·핵심기술 부문에서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협력할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점 주목
  - 다만, EU가 역외 인프라 투자사업인 Global Gateway\*을 활용하고, Team Europe 방식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일부 경합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여지도 존재
    - \*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연계성 증진을 목표로 EU 회원국 정부·민간영역·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역외 인프라 사업
  - 아울러 방위산업 부문에서 공동조달을 강화하고 역내 방위산업 제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제조업 부문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 수출 전략과 상충될 가능성도 존재
- 9-10월에 걸쳐 진행될 집행위원회 구성 결과, 11월이 미국 대선 결과 등 예정된 굵직한 계획들이 향후 EU의 정책 진행 속도와 구체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
  - 9-10월 EU 집행위 소속 위원들을 임명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며, 11월에 본격 임기 시작될 전망
  - 임기 시작 후 첫 100일 이내에 ‘유럽경쟁력기금’, ‘클린산업딜’ 등 여러 전략 발표를 약속하고 있으며, 동시에 의회 내 우파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입법 및 의견수렴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어 집행위의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EU의 정책목표 추진에 있어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

## 〈참고문헌〉

유럽의회 홈페이지(europarl.europa.eu) 참조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commision.europa.eu) 참조

외교부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

임산호 (2024) “유럽의회 선거(24.6월) 계기, EU 경제안보 관련 조치 평가·전망”, 경제안보 Review, 24-9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Financial Times(24.7.19), Five Challenges facing EU chief Ursula von der Leyen in her second term

Politico(24.7.19), Can Ursula von der Leyen save Europe?

SciencePo(24.7.22), Europe’s Choice: The Next Phase of the European Green Deal

EU Commission(24.7.18), Europe’s Choice,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 저자 소개

**임산호** shl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경제, 국제금융, 공급망, 에너지, ESG, 경제제재이다. 주요 논문으로 “포트폴리오투자 유입자본의 국적별 결정요인 분석” 『국제금융연구』 제11권 제1호 (2021), “Optimal bond holding dynamics with hedging against real exchange rate risk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2023)이 있다

## 핵심광물 개발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

\* 경제안보연구동향에서는 주요국 정부, 싱크탱크, 외신 등의 발간물 중 경제안보와 관련되거나 시사점이 있는 보고서 및 문서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 (원문) James Boafol Jacob Obodai, Eric Stemn, and Philip Nkrumah, "The race for critical minerals in Africa: A blessing or another resource curse?", *Resources Policy* Vol.93.,(2024)

유아름 전문관

### 1. 요약

-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
- 아프리카는 세계 핵심광물 자원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리튬, 코발트, 망간, 크롬, 희토류 원소와 같은 자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
- 핵심광물 개발은 서구 국가들과 중국 광물기업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에 활용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사회적·생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

### 2. 주요 세부 내용

- 아프리카 핵심광물 매장량 및 개발 현황
  - (리튬) 아프리카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5%를 차지, 주요생산국은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나미비아, 가나
    - 짐바브웨의 Bikita 지역은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로 알려져 있으며, 약 1,100만 톤의 매장량을 보유, '24년 현재 가나의 Ewoyaa 프로젝트·나미비아의 Karibib 프로젝트 등을 통해 리튬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일부 프로젝트는 시범 생산을 시작
  - (코발트)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약 47%가 아프리카에 위치, 주요생산국은 콩고민주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의 Tenke Fungurume 광산은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지 중 하나로,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고품질 코발트를 생산 중이며 중국 기업들이 주로 운영
  - (흑연) 아프리카는 전 세계 흑연 매장량의 약 21%를 차지, 주요생산국은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탄자니아
    - 탄자니아 Mahenge 지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흑연 매장량을 보유,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고순도 흑연 생산을 위해 개발 중
  - (크롬) 아프리카는 전 세계 크롬 매장량의 약 80%를 보유, 주요생산국은 콩고민주공화국
    - 남아공의 Tharisa 광산은 크롬과 백금족 금속을 생산,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에 필요한 고품질 크롬을 공급

- **(망간)** 아프리카는 전 세계 망간 매장량의 약 85%를 보유, 주요생산국은 남아공과 가봉
  - 가봉의 Moanda광산은 세계 최대 망간 생산지 중 하나로, 철강 및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망간을 공급
- **(희토류)** 아프리카는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15%를 보유, 주요생산국은 콩고민주공화국
  - 남아공의 Steemkampskraal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희토류 원소 매장지 중 하나로,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원소 개발이 진행 중

[표 1] 아프리카 핵심광물 매장현황

광물명	아프리카 매장량(%)*	주요 아프리카 생산국가	핵심광물 용도
리튬	5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나미비아, 가나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코발트	47	콩고민주공화국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구리	6	잠비아	전기 장비 배선 등
흑연	21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탄자니아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제,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크롬	80	남아공	스테인리스 스틸, 안료 등
희토류	15	콩고민주공화국	풍력 터빈, 전기차 모터, 전자기기 등
망간	85	남아공, 가봉	철강 생산, 배터리, 비료 등
백금족	80	남아공, 짐바브웨	수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 연료 전지 촉매

출처: James Boafu, Jacob Obodai, Eric Stemn, and Philip Nti Nkrumah(2024)

\*전 세계 매장량 대비 아프리카 매장량 비율

## ■ 아프리카 핵심광물 개발의 장점

- **(경제 성장 및 발전)** 핵심광물 개발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일자리 창출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위치를 강화
  - 나미비아의 Karibib 리튬 프로젝트는 '25년 하반기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으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투자와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기술 발전 및 투자 유치)** 핵심광물 개발은 기술 발전과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술이전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적 역량 강화가 가능
  - 아프리카 핵심광물 산업은 공급망 주기 초기 단계인 채굴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 단계인 가공 및 제품화(전기차 배터리 제조 등)를 위한 역량 및 기술이 부족해 일반적으로 광물을 비가공 상태로 수출하고 배터리 등은 수입에 의존
  - 이에 가나, 나미비아 등은 해외투자 유치 및 기술이전을 통해 채굴 뿐 아니라 경제적 이윤이 많은 가공·제품화 산업 육성을 희망
- **(에너지 전환 지원)** 리튬, 코발트 등은 전기차 배터리 등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를 위한 필수 자원으로 핵심광물의 주요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

## ■ 아프리카 핵심광물 개발의 단점

- **(생태적 영향)** 광물의 채굴은 생태계 파괴, 산림 파괴, 수질 오염 등 다양한 환경적 문제 초래 가능
  - 가나의 Ewoyaa 리튬 프로젝트는 해안 생태계에서 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해양 생태계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 짐바브웨의 Bikita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채굴은 지역 생물 다양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토양 침식과 오염 심화가 관찰
- **(사회적 갈등)** 토지 소유권 분쟁, 지역 주민의 강제 이주, 기존 생계 수단의 파괴 등이 발생 가능
  - 나미비아,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등지에서 외국 기업과 현지 주민 간의 갈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초래
- **(인권 문제)** 불법 채굴, 열악한 노동 조건, 아동 노동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
  - Xinfeng Investment는 중국 광물회사로 나미비아 리튬 광산, 짐바브웨 Sandawana 리튬 광산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아동 노동 문제로 비판을 받 있는 중
- **(부패와 불법 행위)** 여러 광산에서 외국 기업과 정부 관리들 간의 부패, 불법 광산 운영이 관찰
  -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채굴 권한 부여 과정에서 부패가 만연\*, 외국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광물 채굴을 진행

\* 중국 자금광업(Zijin Mining Group)의 콩고민주공화국 Manono 지역 리튬 채굴권 획득 관련 부패 의혹이 제기

## 3.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필요)** 아프리카의 핵심광물 개발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차원에서 통일되고 명확한 정책적 지침 마련과 규제 강화가 필요
  - 아프리카 연합(AU)이 「아프리카 핵심광물 전략」을 신속히 개발하여 회원국들이 채굴 계약 및 협상을 체결하는 데 지침을 제공할 필요\*

\* 아프리카연합(AU) 차원의 통일된 핵심광물 전략은 부재, 다만 최근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에서 「녹색광물전략(Green Minerals Strategy)」을 개발 중

- **(지역사회 참여와 이익 공유)** 채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체계 구축 필요
- **(환경 보호 조치 강화)** 광산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엄격한 환경 보호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 **(인프라와 기술 투자 촉진)** 핵심광물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 및 제조 단계에서의 현지 참여를 늘리고, 관련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를 권고

## ■ 아프리카 핵심광물 개발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자원 개발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책적 지침과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이 필요

- 특히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핵심광물 산업 관련 기업들이 국제적인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한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 중
  - '22년 발족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24년 韓-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로 발족된 '韓-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와 같은 핵심광물 다자 채널을 활용해 아프리카 광물 개발 관련 사회적·생태적 영향을 고려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

\*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저자  
소개

**유아름** aryoo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기술패권 경쟁, 디지털·AI 규범, 디지털 통상, 빅데이터 분석, 에너지, 중동 정치경제이다. 주요 연구로는『美·EU의 AI 규범 동향』경제안보리뷰 23-17호(2023), 『주요국(美·EU·中·日)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경제안보리뷰 24-1호(2024), 『한국-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리뷰 24-12호(2024) 등이 있다.



## EWS/공급망 및 에너지 동향

현재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관에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공급망 주요 동향을 아래 전달

## [수출통제, 중국] 中 상무부, 안티모니(안티몬) 등 수출통제 조치 발표(8.15)

- 中 상무부·해관총서, 수출통제법·대외무역법·관세법 근거 안티모니 및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 수출통제 조치 시행 예정(24.9.15)
  - (주요 내용) 안티모니 및 초경질 재료\* 관련 17개 품목 및 3개 기술을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으로 전환
    - \* 절삭 도구, 연마제, 군사 장비, 고성능 장비 등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 조치 시행에 따라 해당 품목 및 기술 수출시 수출업자는 상무부에서 발급하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증 취득 필요
  - (전망) 조치 시행에 따른 가격 상승 등 직간접적 영향 주시 필요
    - 중국은 안티모니의 최대 부존 및 생산국\*으로, 해당 품목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국제 시장 영향 가능성 불배재
    - \* 생산량: 중국(48.0%), 타지키스탄(25.2%), 튀르키예(7.2%), 태국, 베트남 등(12%)
    - \*\* 중국 내 안티모니 공급량 감소에 따라 정광 가격 상승 추세(전년 대비 120% 상승)
    - ※ 한편, '24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안티모니 금속 수입국은 태국(59.8%), 베트남(23.5%), 중국(16.2%)로 금번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관세, EU] EU 집행위,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따른 최종 상계관세 발표

- EU 집행위, 잠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7.4)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반영 최종 상계관세 부과 발표(8.20)
  - (주요 내용) 일부 기술적인 오류를 반영하여 관세율 소폭 하향 조정
    - BYD(17.4%→17%), Geely(20.0%→19.3%), SAIC(38.1%→36.3%)
  - (향후 일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8.30일까지) → EU 회원국 최종관세 부과 승인 여부 투표\* → 최종관세 부과(10.30일 이내)
    - \* EU회원국 55%, EU인구 65% 이상 찬성시 통과
  - (평가) 최종 관세 부과에 따른 EU-중국 간 통상 마찰 지속 전망
    - 中 상무부는 EU의 임시 상계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8.9) /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개시(8.21) 등 대응 조치 본격화

## [보조금, EU] 中 상무부,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개시

- EU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최종 상계관세 부과 회람(8.20) 이후, 중국 상무부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개시(8.21)
  - (조사 대상) EU산 유제품(치즈, 우유, 크림 등 포함) / EU와 EU 회원국의 유제품 산업 대상 보조금 사업 총 20개\*
    - \* EU 공통농업정책 관련 보조금 사업 7개 / EU 개별 회원국 운영 보조금 사업 13개
  - 이번 조사 대상 유제품의 연간 對중국 수출 금액은 약 6억 유로 규모\*
    - \* 프랑스(1.9억 유로), 이탈리아(0.6억 유로), 덴마크(0.5억 유로), 네덜란드(0.45억 유로) 順
  - (조사 기간) '24.8.21.일~'25.8.21.일까지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 (평가)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
    -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23.10) 이후 ▲EU산 브랜드(약 16억 유로) ▲EU산 돼지고기(약 30억 유로)에 대한 조사 개시
    - ※ Politico지는 EU산 브랜드의 99%를 프랑스가, 돼지고기의 2/3을 스페인이 수출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프랑스와 스페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평가

## [IRA,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미국 의회 동향

- 일부 美 공화당 내 IRA 폐기 논의 관련,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8명 IRA 세액공제 폐기 반대 의사 표명(8.6)
  - (주요 내용)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하원의장(Mike Johnson, 공화당 소속) 앞 서한을 통해 IRA 세액공제 폐기에 반대 의사 표명
    - \* 하원의 초당적 기후 솔루션 코커스(House Climate Solutions Caucus) 소속
  - 현재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에너지 인프라 신규 투자를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 중인바, 공화당이 IRA 폐기를 추진함으로써 사업 중단 및 민간 투자 위축 등 변화를 겪게 될 것을 우려

## EWS/공급망 및 에너지 동향 [기간 : 24.8.11.~8.27.]

## EWS/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8.11.	<b>[노동]</b> 美 강제노동 제재에 中 신장위구르 면화 판로 확보 직격탄: 중국 당국은 신장 지역 면화에 보조금 주는 방식으로 대응 중(SCMP, KITA)
	8.13.	<b>[광물]</b> '24.8월 탄산리튬 가격' '22.11월 최고가(568,500위안/톤) 대비 90% 이상 하락 : 리튬 공급량 증가 및 전체적 수요 둔화 등에 기인하여 81,500위안/톤으로 하락
	8.13.	<b>[광물]</b> 니켈 및 네오디뮴 등 주요 원자재 가격 '22년 최고가 대비 60-70% 하락
	8.13.	<b>[반도체]</b> 화웨이, 미국 제재에도 엔비디아 H100에 필적하는 최신 AI칩을 곧 출시할 예정(KITA)
	8.15.	<b>[수출통제]</b> 상무부, 안티모니 및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 수출통제 조치 발표(8.15) : 9.15일부터 안티모니 및 초경질 재료 관련 17개 품목 및 3개 기술 수출통제 시행
	8.21.	<b>[과학기술]</b> 정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기능 및 사업방향 발표(8.5) : (사업방향) ▲ 과학기술 지도·관리체제 개선 ▲ '차보즈(卡脖子) 문제*' 해결 * 미국의 기술 봉쇄가 중국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의미
	8.21.	<b>[자동차]</b> 7개 정부 부처, 자동차 신제품 교체 통지 및 자동차 보조금 지급액 조정 발표 (8.18) : 신에너지 승용차 보조금 1만 위안 → 2만 위안 상향 조정 등
	8.21.	<b>[전기차]</b> 상무부, EU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최종 판정 관련 반대 입장 표명(8.20)
	8.21.	<b>[전기차]</b> 상하이자동차(SAIC), EU 전기차 관세에 추가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표 : 업체별 관세 상승폭은 반보조금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되나 SAIC에 최고세율 46.3% 적용(KITA)
	8.21.	<b>[희토류]</b> 공업신식화부, '24년 희토류 생산 쿼터 5.9% 확대 발표(KITA)
	8.21.	<b>[식량]</b> 상무부,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착수 계획 발표: 조사결과 '25년 1월에 발표될 예정(KITA)
	8.22.	<b>[원료]</b> 중국의 자동차 타이어 생산량 확대로 對韓 부타디엔 수입 증가(소부장 공급망센터)
	8.25.	<b>[AI]</b> 美 제재에도 中 AI 투자가 증가, 일부 중국 AI 기업들은 역외 클라우드 접속을 이용해 대중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 칩을 사용 중(KITA)
	8.26.	<b>[반도체]</b> 中 반도체 기업 68개社, 상반기 실적 발표(증권시보, 8.21) : 40개 기업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성장 등 반도체 산업 회복 추세
미국	8.6.	<b>[AI]</b> 상무부, SK 하이닉스와 AI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예비거래각서(PMT) 체결 : SK 하이닉스 인디애나주에 HBM 반도체 고급 패키징 제조 및 R&D 시설 건설 계획(소부장 공급망센터)
	8.12.	<b>[태양광]</b> 태양광 전지(CSPV) 셀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및 관세율 쿼터 12.5GW로 확대(소부장 공급망센터)
	8.15.	<b>[퀀텀]</b> 백악관, 포스트 퀀텀 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표준 발표(8.13) * 퀀텀 컴퓨터에 취약할 수 있는 현재의 암호 표준을 대체

국가	일자	내용
미국	8.15.	<b>[퀀텀]</b> 美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퀀텀 분야 국제협력 강화 보고서 발표(8.12) : ▲국제협력을 위한 전담 장기적 자금 지원체계 구축 ▲부처간 협력 강화 등 권고
	8.15.	<b>[수출통제]</b> 미국·영국·호주, 3국 사이 무기 기술 수출통제 대부분 해제 발표 : AUKUS의 범주 확대 조치로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적용 대상 기술 및 민군 이중용도 기술 등 허가 면제 시행(KITA, NYT)
	8.15.	<b>[공급망]</b> 상무부, 공급망 회의(Supply Chain Summit) 개최 예정(워싱턴 DC, 9.10) : 공급망 취약점 완화·예방 방안 논의 예정
	8.15.	<b>[핵심광물]</b> 美 평화연구소(USIP), 로비토 회랑 관련 美 광산기업 지원 확대 권고(8.8)
	8.22.	<b>[반도체]</b> 백악관, 반도체과학법 2주년 성과 팩트시트 발표(8.9) : (주요 성과) ▲반도체 제조 리쇼어링 ▲일자리 및 인력 파이프라인 구축 등
	8.22.	<b>[IRA]</b> 백악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주년 성과 팩트시트 발표(8.16) : (주요 성과) ▲미국인의 의료비 절감 ▲에너지 비용 절감 등
	8.22.	<b>[반도체]</b>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원격 접근 반도체 규제 권한 법제화 추진 : 상원 재무위원장과 협력하여 국방수권법(NDAA) 개정 추진 중(KITA)
	8.23.	<b>[대러제재]</b> 러시아군에 반도체 등 첨단제품을 수출해온 러시아·중국 등 위장기업 100여곳과 러시아·크림반도·중국·튀르키예·이란 등 123명 수출규제 리스트 등재(KITA)
	8.25.	<b>[IRA]</b> IRA 존폐를 두고 공화당 내부 논쟁 중 : 하원의원 18명, 하원의장에게 IRA 폐기하더라도 에너지 세액 공제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서한 제출(KITA)
일본	8.14.	<b>[반도체]</b> 대만 반도체 후공정기업 ASE, 日 규슈 진출 검토(아사히, 8.14) : 구마모토 TSMC 1공장 양산 개시 관련 규슈 내 TSMC의 일관생산 가능성 주목
	8.22.	<b>[공급망]</b> 정부, 15개 日 기업의 아세안 공급망 구축 지원(닛케이, 8.14) : 반도체·차세대연료 분야 등 15개 日 기업에 350억엔 지원 계획
	8.22.	<b>[반도체]</b> 日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디스코, 인도에 영업거점 마련 예정
	8.22.	<b>[반도체]</b> 日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전제조공정 완전자동화 예정(닛케이, 8.9) : 타사 대비 납기 최대 1/3 단축 및 2027년부터 AI 반도체 양산 계획
	8.22.	<b>[반도체]</b> 日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미쓰비시 UFJ은행 등 4개 은행에 1천억엔 규모 융자 요청 : 반도체 양산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융자 요청 등 자금 조달 본격화
대만	8.22.	<b>[AI]</b> 국가과학기술위, 남부지역을 거점으로 한 'AI 생태계 구축 사업' 추진(KOTRA)
EU	8.16.	<b>[전기차]</b> EU 고율관세 발효 후 중국산 전기차의 역내 수입 급감 : EU 16개국에서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 6월보다 46% 감소(KITA)
	8.19.	<b>[정책]</b> 트럼프 당선 시 EU 경제안보 정책 강화 전망 보도 : 주요 산업 투자 및 민감 기술 보호 추세 가속화 가능성 (Politico)
	8.21.	<b>[전기차]</b>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 최종 상계관세 부과(안) 회람(8.20) : (최종 상계관세) ▲BYD(17.0%) ▲Geely(19.3%) ▲SAIC(36.3%) ▲Tesla(9%) 등

국가	일자	내용
캐나다	8.12.	[관세] 캐나다 철강생산자협회 및 캐나다 알루미늄협회, 중국산 철강·전기차에 대해 미국에 상응하는 관세부과 촉구(KITA)
	8.22.	[인프라] 캐나다 국영철도공사(CN) 및 CPKC 철도, 근로자와의 계약 분쟁으로 운행 중단 : 북미 전체 공급망에 큰 피해 우려(KITA, 로이터)
	8.22.	[인프라] 캐나다 철도 파업, 정부 중재로 운행 재개(KITA)
	8.27.	[전기차] 총리,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에 25%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KITA)
네덜란드	8.24.	[퀀텀] 정부, 금년 중 퀀텀 컴퓨터 수출통제 도입 가능성(FD, 8.23) : 퀀텀 컴퓨터의 국경간 거래시 정부 허가 요구 전망
독일	8.22.	[반도체] TSMC, 독일 드레스덴서 유럽 첫 생산공장 착공식 개최(8.20) : ▲총 100억 유로 투자 예정 및 ▲2027년 말 본격 생산 시작 계획
	8.24.	[전기차] BMW, 유럽지역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 추월(Handelsblatt) : 7월 유럽지역 BMW 전기차 판매량 14,869대로 테슬라(14,561대) 추월
	8.24.	[무역] 독일-우크라이나 무역, 독일-러시아 무역 초과(tagesschau, 8.19) : 올해 상반기 독일의 對우크라이나 수출입 증가 및 對러시아 수출입 감소
브라질	8.23.	[AI] 정부, '국가 AI 계획' 발표(7.30) : ▲AI 인프라 및 개발(57.9억 헤알 투자) ▲AI 훈련 및 역량 강화(11.5억 헤알 투자) 등 5개 부문 중점 추진
칠레	8.14.	[철강] 칠레 제철소 CAP社, 저가 중국산 철강 제품 유입으로 인한 실적 악화로 조업 중단 발표(8.7)
	8.18.	[광물] 세계 최대 구리광산 중 하나인 칠레 에스콘디다 광산 파업 중단, 글로벌 시장 가격 안정될 것으로 전망(KITA)
베트남	8.7.	[관세] 산업무역부, 미국의 對베트남 비시장경제국 지위 유지 결정 관련 재검토 요청 의향 등 입장 발표(8.2)
이스라엘	8.14.	[신용등급] Fitch, 이스라엘 국가신용등급 A+에서 A로 하향 조정(8.12) : ▲가자지구 내 전쟁 지속 ▲고조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신용등급 강등
말레이시아	8.15.	[철강] 국제통상산업부, 한국·일본·중국·인도산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시작(KITA)
태국	8.14.	[수입규제] 저가 중국산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입 규제 강화: 연간 수량·금액 제한 및 반덤핑 대응조치 확대 방침(KITA)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중국	8.23.	[에너지정책] 발개위·에너지국, 에너지 분야 대규모 설비교체 방안 발표 (8.21): '27년까지 ▲화력발전 ▲송·배전 ▲풍력발전 등 주요 분야 설비투자 규모 '23년 대비 25% 이상 확대 계획
일본	8.22.	[재생에너지] 경산성, 이차전지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우대제도 발표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차전지 활용 축전 시 출력제어 대상에서 제외
네덜란드	8.22.	[원자력]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Rosatom, 네덜란드 자회사 통해 수익 창출(NOS, 8.18) : 수익 달러 규모 우라늄 수익 기록 및 러 정부의 간접적 이익 향유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의존 문제로 제재 부과 난항
루마니아	8.23.	[수소] 루마니아, 수소 전동차 도입 계획 취소(8.23) : 참여기업 부재로 3.6억 유로 규모 수소 전동차 구매 계획 취소
	8.23.	[수력] 루마니아 수력공사, 브라디소르 수력발전소 설비개선사업 입찰 재개(8.23)
브라질	8.22.	[수소] 브라질 정부, 저탄소 수소법 공표(8.2) : (주요 내용) ▲국가 저탄소 수소 정책 추진 ▲자발적 수소 인증 시스템 등
인도네시아	8.13.	[석유] 에너지광물자원부, 중국 Sinopec과 석유회수증진(EOR) 사업 협력 추진
	8.21.	[바이오디젤] 정부, 바이오디젤 활용 확대 정책 추진 : 내년 중 ▲B40(팜유 함량 40%) 바이오디젤 상용화 및 ▲B50(팜유 함량 50%) 바이오디젤 사업 추진 준비 예정
필리핀	8.20.	[원자력] 국제 원자력 공급망 포럼 개최 예정(11.13~15)



## 경제안보 Review 2023-2024년 발간 목록

\* 경제안보Review는 외교부 홈페이지의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간호(일자)	범 주	제 목
23-1 (1.20)	분석	탈탄소 에너지전환에서 핵심광물의 역할 및 전망
	현안	미국의 중국 '틱톡(Tiktok)' 제재 재추진 동향
23-2 (2.8)	분석	미국의 첨단컴퓨팅 반도체 규제조치와 해외투자심사
	현안	FY2023년 美 국방수권법 경제안보 관련 내용
	연구동향	IRA 관련 美 백악관 인사 기고문 주요 내용
	연구동향	수출통제 관련 기고문 주요 내용 요약
	연구동향	폴슨 전 美재무장관 미국의 대중 정책 평가 기고문 요약
23-3 (2.22)	분석	해저케이블의 경제안보화
	분석	EU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시사점 - 그린딜 산업계획, Fit for 55 패키지 중심
23-4 (3.8)	분석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3자(미,네,일) 협력 현황 및 전망
	현안	美 행정부의 인-태전략 1년 Fact Sheet 발표
23-5 (3.22)	분석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주요 내용 및 전망
	현안	인권 침해 사유 수출통제 동향
	연구동향	Chris Miller 著 『Chip War』 요약 및 시사점
23-6 (4.5)	분석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현안	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 내용과 평가
23-7 (4.19)	분석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
	현안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금융부문 협력 복원·강화 논의
23-8 (5.10)	분석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및 관련 정책 동향
	현안	대러 제재 효과성 관련 동향 보고
	현안	최근 위안화 결제비중 증가 및 탈달러 현상
23-9 (5.24)	분석	주요국 희토류 공급망 검토 : 중국 희토류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목록 추가 계기
	현안	G7 정상회의 경제안보 관련 내용 요약 및 평가
23-10 (6.14)	분석	유럽 주요국 對중국 대응 동향 및 배경
	현안	美 공급망 구축 2주년 성과보고서 주요 내용
	현안	미-영 「대서양선언」 관련 경제안보 주요 내용 및 평가
23-11 (6.28)	분석	북미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반도체 협력 동향 분석
	현안	G7 차원의 대러 제재 강화 동향: 美-EU측 추가조치
23-12 (7.12)	분석	EU 경제안보전략 주요내용 요약 및 평가
	현안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추진 동향 및 전망
23-13 (7.26)	분석	주요국의 공급망 위험과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현황
	현안	CBDC 발행 전망 및 주요국 추진 동향

발간호(일자)	범 주	제 목
23-14 (8.9)	분석	‘경제적 강압’에 관한 국제 논의 비교·분석
	현안	중국 최근 입법 관련 경제안보 분석 : 대외관계법, 반간첩법 시행 계기
23-15 (8.23)	분석	청정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의 국제협력 동향
	분석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 SiC, GaN 소재 중심으로
	현안	“De-risking” 관련 최근 해외 기고문의 주요 내용
23-16 (9.6)	분석	틱톡 규제 동향 분석: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연계 가능성
	현안	美정부 합동 준수 지침(Tri-Seal Compliance Note) 발표
	연구동향	“BRICS 확장” 관련 최근 해외 기고문의 주요 내용
23-17 (9.20)	분석	미국, EU의 AI 규범 동향
	현안	미국 주도 글로벌 인프라 구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인도-중동-유럽(IMEC)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현안	중국 7nm 첨단반도체 생산 관련 동향
23-18 (10.18)	분석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 추진 현황과 시사점
	현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기후금융 확대 및 시사점
23-19 (11.1)	분석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규정의 내용 및 함의
	현안	美상무부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및 강화 조치 발표
23-20 (11.15)	분석	’24년 美 대선 공화당 집권 시 경제안보 정책 전망
	현안	최근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 동향
23-21 (11.29)	분석	사이버안보 위험 확대와 주요국 대응 동향 : 사이버 공급망 안보를 중심으로
	현안	미국의 AI 행정명령 발표 동향 및 시사점
	현안	인공지능(AI) 반도체 주요 특징 및 수출통제 관련 평가
23-22 (12.27)	분석	’23년 주요국 경제안보 관련 이슈 및 국제협력 동향
	현안	美 IRA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규정 검토
24-1 (1.17)	분석	주요국(EU·美·日·中)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현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홍해 위기의 파급효과와 고려사항
	연구동향	미국의 경제전략 관련 기고문의 주요 내용
24-2 (2.2)	분석	EU 경제안보전략 조치계획(’24.1.24.) 주요 내용
	현안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동향과 시사점
	현안	2024년 다보스포럼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연구동향	『Gen-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Work』 요약 및 시사점
24-3 (2.23)	분석	미국의 전략적 이익 증진을 위한 핵심산업(반도체, 전기차) 보호 논의 동향
	현안	주요국 기술유출 대응 관련 법·제도 동향 보고
	연구동향	포연 없는 전쟁: 글로벌 공급망, 세력 전이 그리고 경제적 통치술

발간호(일자)	범 주	제 목
24-4 (3.8)	분석	WTO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예 선언 연장의 의의와 향후 고려사항
	현안	IPEF 공급망 협정(필라2) 발효: 주요 내용과 전망
	연구동향	Chad P. Bown, 『Trade policy, industrial policy, and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European Union』('24.1) 요약 및 정리
24-5 (3.22)	분석	과잉 의존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공정 유치 현황과 전망
	현안	美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국제과학기술협력 격년 보고서 발표('24.2월)
	연구동향	[해외논문 요약] 미국 수출통제 조치가 일본의 대중국 무역에 미친 영향분석 : 『Supply Chain Decoupling: Geopolitical Debates and Economic Dynamism in East Asia』 (2024)
24-6 (4.5)	분석	중국의 글로벌 태양광산업 장악력과 주요국 대응 동향
	현안	미국의 틱톡(TikTok) 규제: 「틱톡강제매각법안」 하원 통과
	연구동향	미국의 틱톡 규제 관련 전문가 시각 소개
24-7 (4.26)	분석	미국의 물류 분야 경제안보 논의 동향 : 중국의 물류정보플랫폼(LOGINK)을 중심으로
	분석	美 바이든 행정부 경제안보 정책과 조치의 발전
	연구동향	AI 언어모델의 언어적 편견 관련 연구논문 요약
24-8 (5.10)	분석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
	현안	오픈소스 하드웨어 ("RISC-V") 관련 동향
	연구동향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 정책의 최적화』 요약 및 시사점 CSIS('24.2), 『Optimizing U.S. Export Controls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 Working with Partners』
24-9 (5.24)	분석	유럽의회 선거('24.6월) 계기, EU 경제안보 관련 조치 평가·전망
	현안	美 IRA 30D(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FEOC 최종규정 검토
	연구동향	"반도체 밀수경로 맵핑 및 수출통제 준수 개선" 기고문 요약
24-10 (6.7)	분석	주요국의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현안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동향
	연구동향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의 프렌드쇼어링」 주요 내용
24-11 (6.28)	분석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지난 2년간 성과와 과제
	현안	2024년 G7 정상회의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및 평가
	연구동향	"美 반도체 수출통제의 역효과 원인" 논평 요약
24-12 (7.12)	분석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우리 외교예의 시사점
	분석	한국-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동향	미국의 對중국 제재 정책의 효과성 관련 논의 동향
24-13 (8.2)	분석	경제안보 관점에서 글로벌 방산협력의 중요성: 주요국 방위산업 지 형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경제제재와 대응 전략: 이론적 논의와 호주의 사례
	연구동향	"The New Economics of Industrial Policy" 요약 및 시사점

발간호(일자)	범 주	제 목
24-14 (8.16)	분석	"24년 상반기 국내 핵심광물 수급 동향
	현안	미국의 中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 위협 인식
	연구동향	Emily Benson, Catharine Mouradian, Andrea L.Palazzi 著 "Toward a U.S. Economic Security Strategy: Twenty-First -Century Guidanc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making" (CSIS 보고서)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경제안보 관련 정보의 종합 및 분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부에 설립되었습니다. 경제 및 군사와 같은 전통안보가 기술·디지털·에너지·기후·환경·식량·인권 등 비전통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 갈 것입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경로로 기능하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 기발행된 경제안보 Review는 외교부 홈페이지의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경제안보 Review

문 의 [cesfa@mofa.go.kr](mailto:cesfa@mofa.go.kr)

